



주간 통일정세

2013-1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10만명 군민대회'...연일 전쟁분위기 고조(종합)(3/7,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은 지난 5일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한 후 대규모 군민대회를 여는 등 내부적으로 연일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며 주민 결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북한은 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를 비롯해 10만여 명(북한측 추산)의 주민, 군인들이 모임 가운데 지난 5일 발표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연환대회를 개최함.
- 조선중앙TV는 참가자들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불타는 보복 일념을 안고 모였다"며 격양된 분위기를 전함.

● 北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3년째 연례행사(?) (3/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5일 정전협정 파기를 골자로 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후 북한 매체들은 사흘째 이 성명에 대한 주민들의 반향을 앗다뒀 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그만큼 북한 당국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발표 형식에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해석됨.
- 그동안 북한군의 대외 발표에는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최고사령부 보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음.

● 김정은, '연평도포격' 부대 시찰... "전면전 준비완료" (종합)(3/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서남전선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7일 새벽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 등을 둘러본 뒤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사적인(상시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체육촌 시찰...양궁경기도 관람(3/9, 조선중앙통신)**
 -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위기를 고조시켜온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시내 청춘거리 체육촌을 시찰하고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의 양궁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체육촌의 농구·탁구·역도 경기장과 체육선수들을 위한 숙박시설인 서산호텔을 차례로 둘러보고 "체육촌을 훌륭히 개보수하는 것은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리모델링을 지시함.

- **北, 지방서도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 군민대회(3/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북도 군민대회가 9일 진행됐다"라며 "지방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전문학교 일꾼들과 근로자, 교직원, 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다"고 밝힘.
 - 군중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침략자들이 불을 걸어온 이상 반세기 이상이나 기다려온 천금 같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선식의 전쟁방식으로 단숨에 결판낼 것"이라며 "최후승리를 떨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생산보장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대성산 기슭에 세워진 이 종합병원은 연건축면적이 10만여㎡이고 병동 3개에 종합수술실, 집중치료실, 기능진단과, 화상외과, 안과, 구강외과, 사지외과, 초음파과 등을 갖췄음.
- 중앙통신은 개원사를 인용, "선군혁명영도의 첫 시기부터 병사들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대성산종합병원 건설을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부대까지 동원시켜주셨다"며 이 병원이 군인 병원이라는 점을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핵 과학자 뒤에 어머니 있다"…여성 역할 강조(3/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은 대단히 크다"라며 핵 과학자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내세움.
 - 신문은 이날 '여성들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법"이라며 "오늘 핵과 위성을 가진 선군 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장한 모습에는 그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와 아내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배어 있다"고 독려함.
 - 신문은 "모든 여성은 강성 조선의 앞날을 위해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며 그들을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선군혁명 위업의 계승자들로 준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작년 11월부터 北 반입 곡물 급감(3/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4개월간 외부에서 확보한 곡물이 많이 감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전함.
 - FAO가 최근 발표한 2013년 1분기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과 수입 등으로 외부에서 확보한 곡물은 6천800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만 2천t의 13%에 그침.

2. 대외관계

가. 일반

- **김방북 美농구단, 친선전람관 등 관광 후 귀국(3/5, 평양방송)**
 -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과 함께 방북했던 미국 모기 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일행이 5일 평양을 떠났다고 북한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미국 농구팀 일행은 방북 기간에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



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장, 인민대학습당, 평양볼링장 등을 둘러봄.

- **北 "차베스, 주권수호·라틴아메리카 통합에 기여"(3/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암 투병 끝에 사망한 데 대해 조전을 보내 "그가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조전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의 명의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과 엘리아스 아우아 외무장관에게 각각 발송됨.

- **北매체, 中양회 개막에도 '침묵' 일관(3/7,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매년 보도해오던 중국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 소식을 올해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연합뉴스가 7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등 북한의 주요매체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최근까지 한 건도 없음.
 - 지난 5일 개막한 전인대 소식에 대한 보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3일 개막한 정협 소식을 사흘이 넘도록 보도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임.

- **'외화벌이' 위해 중동지역 파견 北근로자 증가(3/7, 연합뉴스; 외교부)**
 - 외화벌이를 위해 중동 지역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중동 지역에 북한인 노무자들이 많이 나가 있다"면서 "북한이 과거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나라뿐 아니라 이른바 외화벌이가 되는 지역에도 근로자를 많이 파견하고 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북한인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면서 "정상적인 교역관계가 축소되면서 북한이 물건보다는 사람을 보내서 현지에서 합작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 "긴장 격화 행동 말라" 촉구(3/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8일 "관련국들이 냉정심과 자제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근본적 방



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6자회담(북핵)

- 유엔 對北제재에 추가될 개인과 기관은(종합)(3/7,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 오전 10시(뉴욕 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는 기관 2곳과 개인 3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은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추가됨.
- 北 예상대로 강력반발...한반도 긴장 격화(3/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기도 전에 북한이 '핵선제 타격 권리 행사를 위협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예상대로 격화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북한은 결의 채택 직전인 7일 오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높임.
- 미국 '핵우산' 재확인...북한 핵보유국 인정못해(종합)(3/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억지력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함.
- 北, 전방위 도발 위협...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나(종합)(3/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제3차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이번에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토록 했으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금지물품이 적재됐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음.
- 北 장성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상태"(3/8, 연합뉴스; 노동신문)
 - 유엔의 제재 움직임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시



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북한군 장성이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인민군 장령(장성) 강표영은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대회에 참석, 군 장병을 대표한 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의 출발진지를 차지한 인민군 장병들은 방아쇠에 손을 걸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타격목표를 확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중화된 핵탄두들을 장착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고 말함.

● 러시아 "북한, 안보리 결의 올바로 수용해야"(종합)(3/8, 연합뉴스)

- 러시아는 7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수용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과 관련한 공보실 명의로 논평에서 "북한이 결의에서 표현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핵무기와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 진행을 포기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함.

● 北외무성 "핵보유국·위성발사국 지위 영구화할 것"(종합)(3/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9일 대변인 성명에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산물로 규정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변인 성명은 "이번 제재결의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도용된 추악한 산물"이라며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이번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준열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함.

● 北 "핵보유, 美·南 책임...핵역제력 유지"(3/9, 노동신문)

- 북한의 대외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비망록을 발표하고 핵보유에 대한 미국과 남한 책임론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전함.
- 이 단체는 '도발적인 반공화국 핵 소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 제목의 비망록에서 "우리는 원래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생각만 했지 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북침전쟁책동과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해온 데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비망록은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핵문제의 해결을 방해해온 장본인"이라며 "역대 괴뢰정권은 미국이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데 대해 묵인, 조장했을 뿐 아니



라 미국의 북침 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 나섰다"고 주장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중통 논평】 "미국이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이상 우리가 유명무실화한 정전협정에 구속된다는 것은 자멸행위"라고 '北 軍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조치(3.5, 성명)' 재차 강조 위협(3.6, 중통/반미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치)
 - 【외무성 대변인 성명(3.8)] 유엔 안보리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對北제재 결의를 전면배격하며 핵보유국·위성발사국 지위를 영구화할 것'이라고 위협(3.9, 중통·중방)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미사일 2천여기 배치...50% 남한 사정권(3/4, 연합뉴스)
 - 북한은 2천여 기의 각종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0%가 남한을 공격하는 미사일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국내 한 미사일 전문가는 4일 "북한은 1990년대 말 기준으로 매년 100기의 각종 미사일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생산 능력을 더 갖췄을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생산된 미사일 가운데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800~1천 기 정도"라고 밝힘.
- 北, 동·서해 잠수함 활동...내주 국가급 훈련 돌입(3/6, 연합뉴스)
 -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동계훈련 때는 122mm 방사포와 자주포, 해안포 등을 동원한 포 사격을 예년보다 3배나 늘린 것으로 전해졌음.
- 北, 동·서해에 선박·항공기 항행금지구역 설정(3/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 기간에 맞춰 동해와 서해에 북한과 타국 선박·항공기의 항해와 운항 주의를 요망하면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이 6일 전함.



■ 기타 (대남)

-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등 관련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모험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군대와 인민은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 및 '선불질을 해댄다면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낼 것'이라고 위협(3.7, 중통·노동신문/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 고의적 도발)
- 【중통 논평】 'B-52H전략폭격기와 F-22스텔스전투기가 北수뇌부의 거처지를 선제폭격할 수 있다'는 발언 거론 '우리의 수뇌부와 제도를 어찌보려는데 진 목적을 둔 용납 못할 테러행위, 핵선제공격연습'이라며 '백두산식 대응방식으로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3.7, 중통/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안보리 새 의장 "대북제재, 6자회담 재개가 목적돼야">(3/4, 연합뉴스)

- 비탈리 추르킨 주(駐) 유엔 러시아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renovated) 대북 제재 패키지는 북한의 핵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
- 3월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을 맡게 된 추르킨 대사는 3일 이타르타스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지난달 12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결의 2087호를 채택했다고 상기한 뒤 "그 것(2087호)에 바탕을 둔 적절한 대응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이 국가명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 달 동안 의장직을 맡는 안보리 의사 규칙에 따라 전임인 대한민국의 김숙 유엔 대사의 후임으로 지명됐음.
- 추르킨 대사는 특히 "새 대북 제재 패키지는 북한의 핵 활동을 벗어나선 안 될 뿐더러 정치적·외교적 수단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핵심 업무를 담아야 한다"면서 "이런 접근법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의 길잡이가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 그의 이런 발언은 한국·미국·일본 등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음. 이는 의장국인 러시아가 앞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서도 우회적인 태도로 '숨방망이' 대응을 주도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이타르타스 통신은 유엔본부의 많은 외교관이 이달 중에 안보리의 북한 핵실험 대응 논의가 종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위의 대북 제재와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한·미·일 등이 제재 수위에서 한 발짝 물러선다면 이달 중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앞서 지난달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핵 프로그램은 제재를 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한반도 주변의 무력증강 구실로 삼아선 안 된다고 경계하고 나섰다. 라브로프 장관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6자회담 재개가 북핵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을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



- <中, UN안보리의 합당한 조선 제재 방안 지지 보내>(3/6, 인민일보)
 -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3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지지하며 조선의 핵실험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이 같은 결정은 신중하고, 적절한 방안으로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물론 핵확산 방지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화 대변인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측 입장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당사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자 공동의 책임이다. 중국은 각 당사국들이 한반도 사태 완화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화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3차 핵실험 제재 관련 결의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합당한 결정을 지지하고 조선의 핵실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안보리의 이 같은 결정은 신중하고, 적절한 방안으로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물론 핵확산 방지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에 입각해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과 유엔 안보리 및 기타 국제무대에 서도 소통과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 <안보리 "추가도발 더 강력제재"...中 '결의 이행 압박'>(3/8, 연합뉴스)
 - 유엔은 7일 오전 10시 5분(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새벽 0시 5분)께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2094호)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들어갔다. 특히,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 안보리는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향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생물 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했다.
 - 따라서, 북한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 그 외의 도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개발 계획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에는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 북한에 대한 금융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됐음.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음. 또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을 차단하라고 요청
 - 그리고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음.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는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음.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우리나라 농축 등 모든 핵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하고, '불소화처리된 유헬유'와 '벨로우즈 싹 벨브' 등 우리나라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운영 관련 품목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
 - 이례적으로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갔음.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음.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음.
 - 추가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임.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늘었음.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북한의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음.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북한이 추가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자초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미국 '핵우산 제공' 재확인...北 핵보유국 인정못해>(3/8, 연합뉴스)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재확인했음.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 백지화에 이어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이 같은 미국의 방침을 분명히 했음.
 -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된 협상에 복귀하더라도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 <중국 "북한제재 결의 '균형 취했다'" 지지 표명>(3/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균형을 취했다"며 지지를 표명.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실험에 필요하고 적절히 대응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친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반영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강조. 또 안보리 결의가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다시 확인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결의가 균형을 잡았다"고 지적했음. 친 대변인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이라며 관련 당사국이 자제하고 긴장을 고조할 어떤 행동도 삼가라고 촉구했음.
- 아울러 친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6자회담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

● <미국 "국제사회 단결"..北핵미사일 공격 방어 장담>(3/8, 연합뉴스)

- 제이 카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공격도 방어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음. 카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 위협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경고. 그는 "북한은 도발이나 위협을 통해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카니 대변인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했음을 상기시킨 뒤 "이번 제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이사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은 이제 금지된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새로운 장애에 직면했다"면서 이번 제재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에 도전했을 경우 그들이 차를 대가가 더 커질 것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 카니 대변인은 아울러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단합해있으며 북한에게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한편,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09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음.
- 놀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어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이 향후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날에 대해 예측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자제. 아울러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를 주장한 것



대미 압박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조선신보 "미국이 올바른 길 택하면 北도 호응할 것">(3/5, 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조된 북한과 미국의 긴장 국면과 관련해 미국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북한도 호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신보는 이날 '대결국면에서 이루어진 조미체육교류'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 직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언급했다며 "물론 정세를 폭발시키는 것이 전면대결전의 목적은 아니며 따라서 미국이 올바른 길을 택한다면 조선도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신보는 미국프로농구(NBA)의 유명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만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난 것과 관련해 "평양에서 실현된 조미체육교류의 화폭에 심오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졌다"며 "그런 교류가 활성화돼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최고 영도자의 기대 표명이 있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조선의 메시지를 바로 읽어야 한다"며 "조선이 설정한 양자택일의 구도는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은 이미 미국 측에 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의 이런 언급은 핵실험 국면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북한과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됨.

● <'북한 핵확산 저지 '글로벌 액션플랜' 필요">(3/6, 연합뉴스)

-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은 이미 실패했으며, 따라서 이제는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5일(현지시간) 제기됐음.
-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제사회의 외교와 제재에도 북한은 전세계와 오랜 '냉전(Cold War)'에서 승리했다"고 지적했음. 그는 특히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전략은 명백하게 실패했다"면서 "유엔 제재에 기반을 둔 압박 전략도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절하. 그는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이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며 이란과 핵기술 협력 가능성을 주장했다.
- 이어 애셔 전 자문관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조언. 그는 이를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 '북한행동그룹' 부활 △국무부 내 고위급 북한제재 담당관 지명 △법무부의 북한 불법 행위 조사 △의회의 북한자유법 입법 등을 미국 정치권에 제안했음.



- 그는 "금융 및 경제적 압박은 군사적 대응 등에 비해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자체 핵능력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 발 핵확산' 가능성을 경계했음.
- 조지프 디트라니 전 소장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핵확산"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긴급 4자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성윤 터프츠대 플래처 대학원 교수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인권'을 지목했음. 이 교수는 우선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차단에 취약하다"면서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직무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음.
-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민주공화 양당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한 뒤 "3차례의 핵실험을 당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인식을 해야 하고 보다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금융제재 등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

다. 중·북 관계

● <“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은 중국에 대한 보복”>(3/6, 연합뉴스)

- 북한이 정전협정의 효력을 오는 11일부터 백지화하겠다고 지난 5일 선언한 것은 중국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제기됐음.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뒤웨이(多維)는 6일 북한은 걸으론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협박을 했지만 사실은 중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중국 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 중국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채택에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격노하고 있음.
- 중국은 대북 제재에 부정적이었던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제재에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북한이 정전 협정 백지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중국에 한 방 먹인 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북한이 정전 협정 당사국의 일원인 중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임.
- 이는 유사시 중국을 미국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교묘한 술책이라는 지적.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북중 우호조약은 상호 간에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한이 한미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일 경우 중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에 "북중은 결국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풀이. 현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강경하게 나올 시점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고 뒤웨이는 전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사실상 매년 되풀이 되는 '과사용 게임' 성격이 강해 북한이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임.
-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 후 이명박 정권과 달리 대북 정책에 유연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한국에 위세를 떨치려는 것은 전략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 북한이 최근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초청해 '농구외교'를 펴며 미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 적대시 정책을 들고 나올 필요가 있느냐고 분석가들은 반문했음.

● <중국, 대북 수출규정 엄격 적용...사실상 제재>(3/7,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수출 규정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밀수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대북 제재를 가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베이징발로 보도했음. 북수의 북중 경제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무역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 세관에서는 2월말부터 수출 규정이 엄격히 적용돼 북한으로 향하는 트럭 적재중량이나 품목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음. 특히 전에는 검사하지 않았던 운전석이나 차량 하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면서 "대북 물자 수송을 중국 당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임.
- 이와 함께 압록강 하류지역 등에서 횡행하고 있는 밀수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돼 식료품이나 생활물자 등의 대북 반입이 격감. 그 결과 대북 물류가 대폭 정체, 평양의 시장에서는 1kg 당 5천500원 하던 쌀이 9천 원으로, 밀감은 1kg 당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치솟는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음. 신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앞서 중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한 셈이 돼 북한의 태도가 더욱 경직될 것 같다고 전했다.
- 다만 황금평 특구 개발 등 북중 공동개발사업은 계속되고 있어 중국의 이번 대북 압력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 <중국 외교부 '북 정전협정 백지화'에 반대>(3/7,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정전협정이 그동안 한반도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에서, 북한의 정전 협정 백지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중국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해 냉정과 절제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음.



- 중국은 또 장기적으로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중국과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안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지지한다고 밝혔음. 화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지지한다"며 "안보리의 대응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
- 한편, 중국 언론들은 정전 협정 백지화 선언에 대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도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임. 중국 환구시보는 6일자에 북한과 미국, 한국은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환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음. 환구시보는 사실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이라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 하지만 뒤웨이 같은 반중 매체는 북한의 대응이 중국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기도 했음.

라. 일·북 관계

- <北 "日의 독도 강탈 야망은 재침의 전주곡" 비난>(3/5,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달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대해 "일본의 파쇼화를 더욱 다그치려는 용납 못 할 범죄행위"라고 5일 비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재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민족의 항의와 규탄에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정부관료를 파견하고 독도강탈의식을 노골적으로 고취한 것은 매우 심상치않은 사태발전"이라며 "일본의 재침야망은 이미 위험단계를 넘어섰다"고 주장
 -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레이더 조기경보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점 등도 거론한 뒤 "재침의 전주곡과 같은 독도 강탈 침략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북한, 마땅히 안보리 결의 수용해야">(3/8,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북한이 마땅히(rightly) 받아들여야 한다고 희망한다고 밝혔음.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정확히 인식하고서 핵무기 분야와 모든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포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 성명은 "러시아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복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음. 성명은 또 "러시아가 지역 문제에 관계한 당사자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악화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안보리는 이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결의를



채택했음.

바. 기 타

● <양제츠 "대북 제재, 근본 해결책 아니다">(3/9, 연합뉴스)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9일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양 부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행사의 하나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묻는 말에 "중국은 항상 제재가 안보리 행동의 목적이 아니고, 유관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이 아니라고 여긴다"라고 밝혔음.
- 그는 "대화로 표면적인 문제와 근본적 문제를 함께 풀고 대화를 통해 당사국들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 양 부장은 7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94호가 북한의 핵실험 반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반대의 뜻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대화 등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음.
- 그는 최근 긴장이 크게 고조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 상태에 놓인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양 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처리, 한반도의 평화 안정, 한반도의 혼란 방지가 관련국들이 함께 짚어낸 책임이라며 당사국들이 대화를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의 장기 안정 실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 '키 리졸브' 연습 돌입...北 군사도발 가능성>(3/10,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1일부터 '키 리졸브(KR) 연습'을 시작.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천 500여 명이 참가함.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참이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해 시행.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키 리졸브 연습 일정을 통보하면서 이번 연습이 현 한반도 정세와 무관한 연례적인 한미연합연습이라고 밝혔음.
- 합참과 연합사는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회원국인 덴마크,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등 5개국의 일부 병력도 참가토록 했음.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파견된 스위스와 스웨덴 감독관도 훈련을 참관할 계획.
- 북한은 이 훈련을 비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단,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을



- 위협. 특히,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연습(KR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에 따라 극도로 높아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11~12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됨.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 설정해 KN-02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군의 한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 우리 군은 이 훈련기간 북한군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음.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하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도발해온 수준의 10배 이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윤상직 "한미FTA ISD 재협의를...TPPA 상황보며 검토">(3/7, 연합뉴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7일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를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일단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를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 그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약이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룬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제 중재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대답.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국제정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제정세가 개선되면..."이라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윤 내정자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제16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문제에 대해 "우리가 추진했던 통상정책은 FTA 허브지만 TPPA는 지역정책이라서 조금 맞지 않다"면서도 "TPPA 진행과정과 참여득실을 보면서 해아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음. 일본이 TPPA에 참여하면 한미FTA의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윤 내정자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도 TPPA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한미, '북미대화 앞서 남북대화' 원칙 공감">(3/9,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대화'를 수용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확고히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현지 고위 외교 소식통은 "향후 북한과 미국이 만나게 되더라도 그 전에 반드시 한국과 북한이 먼저 만날 것"이라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진행된 양국간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만간 국면이 전환되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이 소식통은 "그동안 진행된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미 양국이 깊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한미 양국은 특히,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6자회담의 가동을 통해 '2.13합의'로 국면을 전환시킨 것과 2009년 2차 핵실험 직후 국면의 전환없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이어진 과정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가급적 국면 전환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현명한 선택'을 연일 촉구하고 있음.
-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다"면서 "이는 남북관계의 새 출발을 의미하며, 이 첫단추가 성사돼야 북미 대화 등 전체 협상 프로세스가 선순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우선 개선하는 움직임이 전제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접촉,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또는 변형된 5자(4+유엔) 회담 등 다양한 협상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북한과의 핵협상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 잘못된 행위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오바마 2기 대북정책에서도 그대로 살아있다"면서 "하지만 갈수록 위협요인이 커지는 북한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해야한다는 판



단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일 FTA 첫 협상 이달말 열린다>(3/7, 연합뉴스)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첫 협상을 시작함.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3국간 FTA 1차 협상을 3월 마지막 주에 국내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3국은 작년 11월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올해부터 본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협상범위가 정해질 예정
- 한·중·일 FTA 1차 협상에 이어 4월에는 한·중 FTA 5차 협상이 중국에서 열림. 5월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1차 협상이 예정돼 있음.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협상대표 선정 등 협상에 필요한 기본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다. 한·일 관계

● <차대통령, 아베 총리와 통화...한일관계 향배는>(3/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해 앞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됨.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로부터 취임 축하전화를 받고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박 대통령은 축하전화를 해온 아베 총리에게 사의를 표한 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중요한 동반자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첫 단추는 긴밀한 양국관계만큼 한일 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양국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미래세대에 넘겨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 적극적이고 미래지행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박 대통령의 이날 통화 내용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다소 톤이 낮아진 모습.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등으로 일본에 과거사 성찰을 촉구한 바 있음. 당시 한일관계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2일 시마네(島根)현 주취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의 날' 행사 때 처음 정부 당국자를 파견하는 등 독도 문제와 얽히며 급속히 경색된 상황이었음.

- 박 대통령이 이날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기보다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조한 것은 양국 정상간의 취임 축하 관련 통화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일본 측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민감한 발언을 자제하며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지만 21세기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 안보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이 필수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다만 아베 내각이 기본적으로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데다 언제든지 독도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어 과거에도 수차례 되풀이됐던 양국 관계 경색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음. 결국 관계 개선의 '키'는 이날 통화에서 아베 총리가 "양국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토대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한대로 얼마나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옴.

라. 미·중 관계

● <미국·중국, 아라비아해서 對테러 합동훈련>(3/7,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파키스탄 과다르항에 면한 아라비아해에서 파키스탄 등과 테러대처 등을 위한 합동 해군훈련을 벌이고 있음. 파키스탄 해군은 7일 성명을 내고 파키스탄, 미국, 중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터키 등 13개국이 아라비아해에서 '아만(AMAN)-13'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AFP통신이 전했다.
- 2007년 이래 4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음. 러시아, 독일 등 20개국은 옵서버로 참가. 특히, 훈련에는 미국 구축함 윌리엄 P. 로런스호가 참가했음. 이번 훈련은 중국이 파키스탄 남부 요충지 과다르항 운영권을 싱가포르로부터 넘겨받은 지 2주 만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받았음.
- 성명은 "훈련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테러리즘과 해적행위에 반대하는 참가국들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이어 훈련 참가국들은 해양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 자유로운 항해와 차질없는 무역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공통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아라비아해와 접해있는 인도양 항로들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말리아 해적이 자주 출현, 선박과 선원을 납치해 석방조건으로 수백만 달러를 뜯어냈음. 훈련에 참가 중인 파키스탄과 미국 간 관계는 2011년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미군 사살작전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가 회복단계에 접어들었음.

● <중국 반체제 작가 부부 미국 망명>(3/8, 연합뉴스)

- 중국 반체제 작가인 루하이타오(盧海濤·38)가 최근 부인과 함께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루하이타오·양란(楊蘭)부부는 작년 12월 3일 타이베이(臺北) 여행 중 대만 주재 미국 대표부로 정치적 망명을 한 후 미국행 비행기를 탔음.
- 루하이타오 부부는 망명 과정에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대만 주재 미국 대표부 등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았으며 현재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음. 루하이타오 부부의 망명은 작년 11월 중국 권력이 교체된 제18차 당대회 이후 첫 발생한 중국인의 망명이어서 마중간 외교 마찰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 또 대만 당국이 이 망명 사건에 관련돼 3당사자 간 외교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7일 루하이타오 부부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 베이징의 인권 운동가 후자(胡佳)는 루하이타오가 타이베이 여행 기간 스밍더(施明德) 등 대만의 저명 사회 활동가들을 만난후 미국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작년 11월17일 18차 당대회가 끝난후 대만으로 여행을 떠난 루하이타오 부부는 당초 12월 1일 귀국할 예정이었음.
- 루하이타오는 여러 편의 장단편 소설을 썼으며 지난 2011년 열차 전복 사고를 계기로 사회 문제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인권 활동에 나섰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을 만나고, 복역중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부인 류샤(劉霞)를 찾아 위로하기도 했음.

마. 미·일 관계

● <일본, TPPA 참가 초읽기...자동차 관세 철폐유예 수용>(3/5,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의 최대 현안인 마일 자동차 협상과 관련,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양보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양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5~10년보다 길게 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수입 승용차는 2.5%, 트럭은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양보는 농산물 관세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임.
- 마일 자동차 분야 협상이 가닥을 잡음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르면 이달 10일 안으로 TPPA 교섭 참가를 정식 표명할 것으로 보



입. TPPA는 '관세의 원칙 철폐가 전제조건이지만 미 자동차 업계는 일본이 TPPA에 참가하면 일본차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이 때문에 미국측은 올 1월 자동차 수입 관세를 당분간 유지할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

-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발효된 FTA에서 미국이 한국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트럭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10년째에 철폐하기로 했음.

바. 중·일 관계

● <주일 중국대사 "중일 교전 방지해야">(3/4, 연합뉴스)

-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과 관련해 "위기관리를 강화해 교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청 대사는 3일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건강·안정의 궤도로 점진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음.
- 청 대사는 현재 중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40주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성의 부족'이 논의 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 청 대사는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지만 국가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반 발자국도 양보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중국과 함께 노력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영토 분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 출신인 뤼신화(呂新華) 정협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서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로 중국의 정상적 순찰을 간섭하다가 교전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했음.

● <중국, 센카쿠 부근서 자국 선박 입회검사>(3/7, 연합뉴스)

- 중국 정부 선박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부근에서 자국 어선에 올라타는 등 입회 검사로 추정되는 행동을 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어업감시선 승조원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센카쿠 열도 중 다이쇼(大正)섬(중국명 츠웨이위(赤尾嶼)) 주변에서 부근을 지나던 중국 어선에 올라탔음. 어민 여러 명이 감시선에 옮겨 탔고, 중국 어업감시선 2척은 중국 어선을 사이에 둔 채 중국 쪽으로 이동
- 일본 측은 중국 감시선이 센카쿠 영유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자국 어선을 입회 검사한 것으로 보고 있음. 교도통신은 중국 어업감시선과 어선이 이런 행동을 한 지점이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200해리=370km) 안이라고 전했음. 한편, 중국 어업감시선은 작년 9월에도 중국 어선을 입회검사한 적이 있음.



- 앞서 이날 오전 중국의 '해감(海監) 23호'와 '해감 27호,' '해감 51호' 등 해양감시선 3척과 '어정(漁政) 206호,' '어정 32501호' 등 어업감시선 2척이 센카쿠 주변의 일본 측이 주장하는 접속수역(12~24해리=22~44 km)에 진입했음. 중국 선박은 최근 나흘 연속으로 센카쿠 접속수역에 들어갔음.

● <중국, 올해 센카쿠 열도 측량대원 상륙 예고>(3/9, 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다툼 중인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상륙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9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정협 위원인 국가측화국(국가측량국)의 리밍더(李明德) 부국장은 전날 "올해 적절한 시기를 택해 측량대원들을 댜오위다오에 보내 측량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댜오위다오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리 부국장은 측량대 파견을 통해 무인기와 위성사진에만 의존한 것보다 더욱 정확한 댜오위다오 지도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중국 측량대가 센카쿠 상륙을 시도하면 일본은 강력한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작년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중화권 민간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센카쿠에 잠시 상륙한 적이 있지만, 중국의 정부 기관 소속 인원이 댜오위다오 땅을 밟은 적은 없음. 한편, 중국 정부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스카보러섬(중국어명 황옌다오)에 새로 건조한 500t급 어업관리선을 파견했다고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전했다. 이 어업관리선은 스카보러섬 주변 해역에서 자국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는 활동을 할 계획

사. 중·러 관계

● <시진핑, 러시아·남아공 등 4개국 순방>(3/9,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러시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4개국을 순방예정.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9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차기 국가주석'의 첫 해외순방 계획을 이 같이 밝혔음.
- 시 총서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인대에서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국가주석 자리를 넘겨받아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할 예정. 양 부장은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최대 이웃 국가로서 서로를 우선 협력 상대로 여기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 부장은 이어 "중국과 아프리카는 형제이자 좋은 친구로서 중국의 새 지도자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아프리카와 관계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설명
- 시 총서기는 이달 25~27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제5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참석할 계획이어서 4개국 순방은 이 시기를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 그러나 양 부장은 4개국 가운데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인지를 포함,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음. 외교가에서는 시 총서기가 러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할 것으로 예측.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시 총서기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처음 방문하는 국가가 됨.

- 한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 시 총서기가 첫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택한다면, 그건 중국이 아시아 복귀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자국 견제를 노골화한 미국을 겨냥한 행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